

민주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 한 목소리

이재명·김경수·김동연, 일제히 공약
본선서 당 공식 공약 채택 가능성
‘용산 체제’ 결별로 중원 민심 구애
오늘 오후 경선 후보자 첫 TV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집권을 전제로 한 ‘세종 대통령실 시대’ 청사진을 17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 등 경선에 뛰어든 모든 후보가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대선 본선에도 민주당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전을 과학수도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클러스터로 전환과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충청권에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겠다”며 대전(AI·우주산업)에서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을 잇는 유기적인 첨단산업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다.

앞서 김경수 후보는 지난 13일 세종에서 출마선언을 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전 이전 및 대통령집무실 세종 이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김동연 후보 역시 그동안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 및 충청권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우선 윤석열 정부 ‘용산 대통령실’과의 결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집무실을 이전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후보의 경우 “용산 대통령실을

평가도 나온다.

아울러 민주당의 첫 순회경선지가 충청으로 결정되면서, 주자들의 충청권 공약이 다른 지역 공약에 비해 더 빠르게 공개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런 흐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대선 본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원 민심을 공략하는 데에도 유용한 어젠다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단기간이라도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한 뒤 문재인 정부 때 썼던 청와대를 보수해 들어가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세종으로 완전 이전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실제 이전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동연 후보는 “개헌을 추진하며 지방

분권과 자치 발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헌법에 담는 기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세종 이전을 위한 개헌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전 세부 계획 등에서 주자들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니 토론을 거쳐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석하는 첫 방송 토론회가 18일 오후 8시30분 MBC 주관으로 열린다. 80분간 진행되는 이번 첫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정치와 경제·외교·안보, 사회 등 3가지 분야를 다룬다. 사회자의 공통 질문 및 주도권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TV조선이 주관하는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두 번째 TV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이 17일 국회에서 16~17일 이틀간 '주간 여의도 집무실' 일정을 마친 뒤 긴급현장회의를 열어 광주시 부시장, 실국장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추경예산 확보·대선 공약 반영 '총력'

강 시장, 여의도 집무실 가동
5개 정당에 지역 현안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 세일즈를 펼치는 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제출이 임박함에 따라 지역 대표 산업인 인공지능(AI) 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 시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가동하고, 5개 정당에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 핵심 프로젝트 반영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 AI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서남권 관문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섰다.

여의도 근무 이틀째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정 예결위위원장을 만나 “AI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강 시장은 앞서 16일에는 허영 예결위 야당 간사를, 15일에는 광주를 방문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추경안에 AI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설립 및 운영 경험'

축적 △초·중·고·대학에서 산업현장까지 '뿌리부터 튼튼한 인재양성 체계' 확립 △270여개에 달하는 '기업 투자유치' 성과 등을 설명하면서 “‘인프라-기업-인재’를 고루 갖춘 광주에 ‘속도’와 ‘집적’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시장은 각 정당을 상대로 한 '대선공약 세일즈'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광주시 대선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정당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행정'에 주력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서왕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윤종오 진보당 상임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전종덕 원내부대표, 장진숙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설명했다. 개혁신당에도 광주의 핵심 프로젝트를 담은 대선공약을 전달했다. 16일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협력을 구했다.

정상이 기자

국토교통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조용~

대한민국 주거안심 HUG하세요!

주변보다 저렴하게 HUG가 직접 임대해주는
든든전세주택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사기 예방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심전세앱